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 24 통권 165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 · 조세 · 재정 · 고용 분야

기획재정부

6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총 1억원 공제(양가 합 2억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10% → 15% + 추가공제 1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100% 지배 → 90% 지배도 가능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11% → 10%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10% 세율구간 60억 → 120억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업종변경 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 15% 미만인 경우만 추가납부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 가산세 한도 5천만원(비중소기업 1억원)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 현행 10억원 → 50억원으로 완화

금융위원회

26

고용노동부

29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 · 조세 · 재정 · 고용 부문

— 기획재정부, 2024. 1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지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 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4.1.1.)
-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 → '24년 11만여 가구)('24.1.1.)
-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4. 문화·체육·관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24.3.22.)

*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

5. 환경·기상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 ('23) 대하천 분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 → ('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中)
 -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 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 ☐ 지산지소(地產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력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 *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교통

-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 50→20분으로 단축)
-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 *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

(‘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24.1월)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 서민 · 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 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수산·식품

-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 · 한방 의료, 치과 · 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 · 병무

-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 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행정·안전·질서

-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기획재정부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추진배경 :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현 행		개정안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추진배경 :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추진배경 :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추진배경 :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 주요내용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합니다.

*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 주요내용 :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추진배경 : 기술개발 유인 제고
- 주요내용 :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적용제외 대상)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개정내용은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상향합니다.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 원 초과 : 40%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추진배경 : 기부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공제율)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 40%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4,000 → 7,000만 원)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자녀 1인 당 80 → 100만 원)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추진배경 : 출산·양육 지원
- 주요내용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추진배경 : 출산·양육 지원
- 주요내용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등

- 추진배경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연 1,200 → 1,500만 원)됩니다.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추진배경 :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육아휴직 지원
- 주요내용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범위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의 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장려금 산정액의 90% → 95%)됩니다.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추진배경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 주요내용 :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산정액의 90% → 95%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연결납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됩니다.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연결납세제도 활용도 제고
- 주요내용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모법인이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조정됩니다.

■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 추진배경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주요내용 :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곱하는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인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상향

- 추진배경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 : 비과세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상반기중 가입자는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되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이후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내년부터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되는 상반기 중 가입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추진배경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7월 기간 중 가입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판단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합니다.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득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

- 추진배경 :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 주요내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및 출자금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주요내용 :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시행일 : (저율과세 구간 · 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을 완화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개정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추진배경 :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
- 시행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공익법인이 매 과세연도마다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를 정비합니다.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변경)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 산정 시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년도의 평균가액을 사용합니다. (종전 3개년도 평균가액 사용)
- (지출실적 산정기준) 종전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만 지출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도 지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위반 시 제재 합리화)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5% 이하 보유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종전에는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추진배경 :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 의무지출제도 합리화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 제도가 확대됩니다.

-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① 즉시환급, ② 도심환급 및 ③ 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

-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 1.5만 원)하고 즉시환급(1회 50→ 100만 원, 총 250 → 500만 원)
· 도심환급(500 → 600만 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 추진배경 :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현 행	개 정
◎ 사후환급 최소 기준 - 1회 거래가액 3만 원 이상	◎ 최소 기준 인하 - 1회 거래가액 1.5만 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만 원 미만 - 총 거래가액 250만 원 이하	◎ 한도 상향 - 1회 거래가액 100만 원 미만 - 총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 도심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 한도 상향 - 1회 거래가액 600만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맥주 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주종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종량세 주종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주세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 법정세율의 $\pm 30\%$ 범위내에서 조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이 적용됩니다.

* (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추진배경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을 적용
* (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 시행일 : 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

입하여 시행합니다.

■ (공제대상)

- 광업권 · 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 · 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추진배경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 주요내용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세액감면 확대) 소득세 ·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 → 10년) 확대*

*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현 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 주요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5개국 참여)

-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추가세액) 국가별로 실효세율 기준 15%미만 분
 -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내*
 - * 최초적용연도에는 18개월 내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 주요내용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추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6~10명으로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또한,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 ·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 주요내용 :
 -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
 - 이의신청·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및 조세심판 청구 중 주심 단독처리 대상 확대
- 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를 위해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취득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매각결정기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추진배경 :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
- 주요내용 :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전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허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향수의 여행자 면세한도가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됩니다.

(24. 1. 1.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됩니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 추진배경 : 여행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 휘발유 : 리터당 396.7원, 경유 : 리터당 238원, 석유가스 중 부탄 : 킬로그램당 176.4원

발전연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합니다.

* 발전용 LNG(10.2원/kg), 고열량탄(41.6원/kg), 중열량탄(39.1원/kg), 저열량탄(36.5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유류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연장

- 추진배경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등
- 주요내용 :
 - 휘발유, 경유, 부탄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2개월 연장
 - 발전연료(LNG, 유연탄 등)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6개월 연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 추진배경 :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
- 주요내용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 원 → (개정) 50 억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자격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추진배경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추후 공지)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3.5.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할 필요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 주요내용 :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째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매년 7월경)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 및 과세적용 여부를 결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을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23.10.24일, 「보험업법」 개정)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앞으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추진배경 :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 주요내용 :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 *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 기존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 · 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 2023년도 경영현황은 2024년 4월말 공개되고, 2023년도 이후 경영현황은 차기년도 4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 · 정보접근성이 제고되어 국민과 시장의 견제 ·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추진배경 :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
- 주요내용 : 주요 공개항목 : 은행 기본정보(영업점, 직원수 등), 자산/부채, 수익(이자·수수료 이익, 예대금리차 등)/비용(성과급, 희망 퇴직금 등), 당기순이익 활용(배당, 자본적립 등)
- 시행일 : 2024년 4월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주요내용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시행

구분	'23년까지	'24.1.1.부터
공공	50억 원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모든 퇴직공제 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민간	100억 원 이상 가	

- *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개편내용 :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 200 母 : 200	父 : 500(200+150+150) 母 : 200	父 : 950(200+150+150+150+150+150) 母 : 200
母 3개월	父 : 200 母 : 500(200+150+150)	父 : 750(200+250+300) 母 : 750(200+250+300)	父 : 1,200(200+250+300+150+150+150) 母 : 750(200+250+300)
母 6개월	父 : 200 母 : 950(200+150+150+150+150+150)	父 : 750(200+250+300) 母 : 1,200(200+250+300+150+150+150)	父 : 1,950(200+250+300+350+400+450) 母 : 1,950(200+250+300+350+400+450)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추진배경 :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 지원
 -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추진배경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
- 주요내용 :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잠정)
 -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정

- 추진배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주요내용 :
 -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단, 공사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안전동행 지원사업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산업안전분야 이종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주요내용 :
 -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 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 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추진배경 :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준	2024년 2월 1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그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주요내용 :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예정)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 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 (지원기준)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
 -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I 유 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중위소득 60%↓	4억 원↓ (청년 : 5억 원↓)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구직촉진 수당(월 50-90만 원, 6개월)
	선발형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합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중위소득 120%↓		무관	
II유형			중위소득 100%↓ (청년 :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취업지원+ 취업활 동비용(예 : 훈련참 여수당 월 28.4만 원, 6개월)



- 2024년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연령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 추진배경 :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 주요내용 :
 -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 시행일 : 2024년 2월 9일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합니다.

-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 : 투자비의 50%(2천만 원 한도)
 - *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 투자비의 70%, 연 250만 원 기준(3년) 지원
-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 * 재택·원격·선택근무 :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시차 :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제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추진배경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구분	기존	개편 후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전년 동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삭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추진배경 :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 시행일 : 2024년 1월 (예정)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무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신설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주요내용 :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무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 ①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 시행일 : 2024년 1월 22일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2024년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2024년 운영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하고,
-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모집 캠퍼스 및 학과, 일정 등의 신입생 모집 계획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추진배경 : 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 신설 및 2024년 시범운영
- 주요내용 :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
 - * 만 18~24세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되, 훈련 수요에 따라 연령범위 확대 검토
 -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수준 및 기간) NCS 레벨 2~4 수준(기존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6개월
 - (훈련내용)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추진배경 :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
- 주요내용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年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 2년 시범사업(예정)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며,

- *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합니다.

- 그간의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훈련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개편 추진
- 주요내용 :
 - (훈련분야 확대) 기존 디지털 중심 → + 첨단산업 + 융·복합 + 기타 훈련공급 부족 분야
 - (지원대상 확대) 기존 구직자 중심 → + 재직자
- 시행일 : 2024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는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돌봄서비스 훈련 분야에 전면 적용됩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추진배경 :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 신설
- 주요내용
 - 훈련비 지원
 - (지원 훈련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 (선 부담 훈련비 환급)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선 부담한 훈련비 환급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합니다.

- 대기업은 자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 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합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추진배경 : 대기업-협력사가 수직적 계열을 이루는 산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역량강화가 곧 산업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체계적인 직업훈련지원 필요
- 주요내용 :
 - (운영기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대학 위탁 운영 가능)
 - (훈련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합니다.

-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고,
- 기업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 숙련기간 단축, 훈련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일학습병행제 신설

- 추진배경 :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3년 일학습병행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14년~현재까지 재직자 비율 72%) 운영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촉진 기능 약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 강화 도모

- 주요내용 :
 - (운영기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
 - (훈련대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사전이론교육(직무관련 기초교육 등), 훈련비(이론교육+현장훈련), (필요 시) 직장적응 서비스
- 시행일 : 2024년 1월(예정)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합니다.

-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합니다.
- 2023년에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부터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추진배경 :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필요

• 주요내용 :

- (운영기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비전문 외국인력(E-9)
- (훈련내용) 직무+언어+문화 교육

① 직무 훈련

- (직업능력) 조선사별 여건·수요 반영한 표준화된 직무훈련
- (산업안전) 산업별 안전보건교육 통한 사업장 안전성 확보

총 훈련시간의 70% 이상

② 한국어 교육

- (원활한 훈련 수강 및 생활 영위) 업무수행과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교육 및 원격 훈련 콘텐츠 등 통해 언어 장벽 해소

총합하여 훈련시간의 30% 이하

③ 문화 교육

- (초기 적응) 한국 문화 교육 및 한국 근로자 교류 활동 등
- (장기 정주화) 조선업 등 산업별 비전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심리상담 등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 : 2024년 1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
 - 2024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첫째,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둘째,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주요내용 :
 - 대상확대 :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됩니다.

■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이 감면되며,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이 감면됨

- ** 보전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해당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분의 1 감면

■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주요내용 :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시행일 : 2023년 9월 27일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2일 (금)	1월 15일 (월)	1월 16일 (화)	1월 17일 (수)	1월 18일 (목)
미 달 러 (USD)	1316.00	1314.10	1319.30	1329.00	1343.20
일 본 엔 (JPY)	906.24	906.03	905.09	903.22	906.74
영 국 파 운 드 (GBP)	1679.81	1438.55	1678.74	1679.39	1702.84
캐 나 다 달 러 (CAD)	982.60	979.94	982.39	984.92	994.37
홍 콩 달 러 (HKD)	168.34	168.03	168.64	169.79	171.72
위 안 화 (CNH)	183.51	183.35	183.63	184.70	186.19
유 로 화 (EUR)	1444.11	1438.55	1444.44	1445.69	1461.67
호 주 달 러 (AUD)	880.67	878.41	878.39	875.48	879.53
싱 가 폴 달 러 (SGD)	988.84	986.45	989.31	990.13	999.0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3.25	282.75	282.54	283.25	284.73